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의장 방한결과 보고서

1. 지난 5.24-25간 방한한 Richard Manning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의장은 방한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

- 본인은 2003년 11월에도 DAC의장 자격으로 방한했으며, 한국의 개발원조의 기본골격은 그때와 변함이 없음. 즉,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은 외교부 산하 KOICA가 시행하고, 유상원조는 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EDCF 담당부서가 시행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원조는 별도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ODA로 산정치 않고 있음.
- 한국의 ODA 규모는 2005년도에 7억불을 훨씬 상회하였고, 2009년까지 GNI의 0.1%,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각각 10억불 및 32.5억불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 한국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ODA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최근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

문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3배로 증액(1억불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ODA는 여러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NGO들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 국무총리가 최근에 ODA전략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지난 3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함.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고 15개 부처 대표 외에도 NGO, 학계 및 실무급 대표회의 및 금년 하반기에 제2차 총리주재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로부터 동 위원회가 다룰 정책이슈 리스트를 받아 보았음. 한국의 ODA의 정책목표는 여타 선진국의 ODA와는 구별되면서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의 빈곤탈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ODA를 집중시키며,

민주주의 및 민간안보를 병행 추진

- 각 대륙별로 핵심협력대상국을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전략 채택 (과거에는 남북한간 외교경쟁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을 널리 시행)
- 무상기술협력사업과 유상원조를 연계시키며, 점진적으로 Sector-Wide Approach 시행

■ 국무조정실은 종합적인 중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바, 새로운 ODA법 제정, 다양한 원조사업의 조화, 점진적 비구속성화 추진, 긴급원조체제 정비, 인적자원 개발, 한국의 개발연구능력 강화(ODA 연구센터 설립, 개도국에 대한 지역연구), NGO의 참여 강화(현재의 matching finance 및 block grant 체제 검토) 및 2010년까지 DAC 가입 추진 등임.

■ 이러한 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국무조정실 및 핵심사업부서의 기관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여러 면에서 국가적으로 이를 확고히 추진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이번에 만나보았던 사람들의 강한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 젊은 세대로부터는 국제적인 모습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KOICA 직원과의 대화시간에 더욱 그러하였음.

■ 물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ODA 규모 확대 결정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원고와 유상원조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음. 외교부와 재정부는

각각 별도로 사업 확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예산프로세스에서 top-down 결정이 필요한 것임. 이는 별도 부처인 예산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방문에서 면담을 하지 못하였음. 이 문제는 총리주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사항이 될 것이며, 한국정부의 사업우선순위 및 수원국간 균형측면에서도 임팩트가 클 것으로 보임.

■ 현재 대다수 사업은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KOICA의 사업내용은 다양한 소규모 기관 프로젝트로서 '한국의 우의' 라는 인상이 강함. 이러한 사업경향은 원조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이 특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여국이 되면서 변화하게 될 것임. 이는 외교부의 고위관계자도 인정하는 것이긴 하나 시간이 소요될 것임.

■ DAC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저소득국가이며, 북한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인 바, 국민들의 지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내년중 고위급 세미나 개최 예정도 이러한 목적때문임.

■ DAC 가입은 한국의 ODA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적절할 것임. 한국의 ODA는 규모면에서 가입요건을 쉽게 충족할 것이고, 통계 측면에서 그간의 협조실적이 탁월하며, DAC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해 배울뿐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DAC의 경험은 성과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이미 KOICA 및 EDCF는 어느정도 평가능력을 갖추

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내 이루어진 컨센서스는 향후 4~5년안에 DAC 가입추진이지만 일부 부처는 좀더 빨리 가입절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정식 DAC 가입 이전에 파리선언을 비롯하여 원조정책 및 원조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측이 제의한 바 있는 외교부 직원의 DAC 사무국 파견(secondment)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반면에 한국의 ODA 검토(Peer Review light)에 대하여 한국측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며, 실제로 일각에서는 early commitment 및 peer pressure에 조기 노출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감지됨. Untying 문제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Soft Loan의 경우 그러하였음.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의 정확한 규모

는 모르지만,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각각 15백만불 내지 2천만불의 지출이 이루어졌음. 한국정부는 DAC 가입시 취해야될 조치를 잘 알고 있으며, 정확한 가입시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속도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보임.

2. DAC의장은 주요 회원국 방문후에 통상 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내부관계자 및 DAC 상주대표에게 회람하고 있으며, 상기 한국방문결과 보고서 초안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ODA 추진상황과 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